

한국패션협회 ‘K-패션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전략 이슈 컨퍼런스’ 개최 K-패션 K-벤더사 들을 위한 대응 방안 제시

- 한국패션협회(회장 성래은)는 지난 4월 23일 영원무역 명동빌딩에서 “K-패션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전략 이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동 행사는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K-패션산업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내 패션 및 벤더 기업들의 실질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와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이슈 컨퍼런스에서는 ‘트럼프 2.0 관세 정책, 패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김·장법률사무소 송지연, 황민서 변호사의 기조 강연과 유명희 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존 레너드 前 미국 관세국경보호국 무역부 부국장보가 참여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기조 강연에서 송지연, 황민서 변호사는 불균형 무역관계 재조정, 제조업 부흥, 對중 견제 정책 강화 등 트럼프 2.0 통상정책의 기조를 언급하며 패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송지연 변호사는 국내 패션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높은 상호 관세율과 중국 선사 및 선박을 이용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 조치가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황민서 변호사는 90일의 유예 기간 동안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공급망 파악을 철저히 하고 관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이전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회 수출에 대한 집행 강화 가능성,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등 원산지 규정에 따른 증빙자료의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업계의 주요 질의를 중심으로 유명희 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존 레너드 前 미국 관세국경보호국 무역부 부국장보가 트럼프 2.0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 유명희 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2.0 관세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장의 충격이 트럼프 정부의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에 소비재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설명했다.
 - 존 레너드 前 미국 관세국경보호국 무역부 부국장보는 “미국 정부에서는 불법 우회 수출과 관세 회피를 집중 단속 중에 있으며, 국내 패션 및 벤더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협회 성래은 회장은 “우리 패션업계가 이번 미국 관세 조치로 다소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관계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이 위기를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